

고독死 없는 서울 만든다… 예방서 장례까지 ‘8개 대책’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이웃살피미’ 투입… 1인가구 조사
자조모임 등 사회적관계 형성 도와
전국최초 ‘공영장례 서비스’ 도입

서울시가 지역 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과제가 담긴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방안을 모아 주민과 함께하는 고독사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 사회적 관계 형성 ▲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 공영장례 서비스 등 3대 분야 8개 대책을 내놨다.

◆고독사 돌봄 시스템 시급

서울시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내 378만 가구 중 1·2인 가구수는 54%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는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사회 안전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 상당수는 질병에 시달리던 중장년층 남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162건에 이르는 고독사 사례 가운데 45~65세 중장년층 남성이 137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고시원, 옥탑방, 쪽방 등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과 실업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

절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독사한 사망자의 39%가 당뇨나 암 등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원인은 사회적 관계망 단절과 실직으로 인한 빈곤,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는 우선 지역 주민이 직접 1인 가구를 찾아가 살피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을 만들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도록 돋보기로 했다.

올해 이 같은 일을 하는 ‘이웃살피미’

를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서 꾸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은둔형 1인 가구는 동주민센터보다 동네 이웃이 방문하는 것에 거부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통장이나 집주인 등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이웃들이 고립된 1인 가구를 찾아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돋는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서 ‘이웃살피미’를 꾸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벌인다.

병원·약국·집주인·편의점 등은 내원 환자가 다시 찾지 않거나, 관리비를 오랜 기간 밀리는 경우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하면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는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

◆개인 상황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시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도 지원한다. 시는 1인 가구가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맷도록 자조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에 처한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확대한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경화, 당뇨 등 질병을 앓는 1인 가구에는 정신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

◆존엄한 죽음 위해 ‘공영장례’ 도입

시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도입한다.

22일 공포될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는 기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 장례를 시범 도입하고,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기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영장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가 올해 고독사 예방 대책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8억원이다. 한 달에 1억 5000만원인 셈이다. 이를 25개 자치구로 나눠 계산하면, 한 달에 고독사 예방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600만원꼴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공자전거 ‘파릉이’ 이용자 62만 돌파

서울시설공단, 운영 빅데이터 분석

하루 1만1300건… 평일 이용 많아
출퇴근 시간때 이용자 38% 집중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파릉이’ 이용자가 서비스 개시 2년 반 만에 62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파릉이 운영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간대별 ▲월별 ▲지역(자치구)별 ▲연령대별 ▲성별 이용 정보를 발표했다.

파릉이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1만 1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9시, 오후 6시~9시에 38%가 집중됐다.

일 평균 이용건수는 평일(1만3301건)이 휴일(1만2584건)보다 717건 더 많았다. 평일 기준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시간은 오후 6시~9시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휴일에는 오후 3시~6시(2867명) 이용자 수가 23%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9월이 88만987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86만3105건, 8월 54만



서울시 공공자전거 ‘파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서울시

559건 순이었다.

파릉이를 가장 많이 이용한 자치구는 마포구로, 78만1594건(16%)이 집계됐다. 이어 영등포구 65만3789건(13%), 종로구 48만7342건(10%), 성동구 37만7068건(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성비를 보면 남성이 63%로, 37%인 여성보다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였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파릉이 안전 이용 운동에 활용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자가 많은 대여

소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해 안전 장비 착용 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는 자전거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노후·불량 자전거를 교체하는 ‘내구연한 등급제’의 연내 도입을 추진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지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파릉이 2만대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대여소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파릉이를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용산 만리동광장에 ‘손기정 바닥동판’

서울시는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만리동광장에 국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의 바닥동판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만리동광장에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때 받은 월계관 묘목인 대왕참나무 160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

‘손기정 참나무’ 바닥동판은 0.5m 크기로 가운데에 손 선수의 발이 새겨져 있다. 동판에는 베를린 올림픽 당시 시상대에 올라 나무 화분으로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리는 이야기도 새겨 있다.



만리동광장에 설치된 ‘손기정 참나무’ 바닥동판.

/서울시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손기정 참나무’ 바닥동판은 마리톤 영웅 손기정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과 지역의 장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손기정 공원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정비사업 인가 지역 ‘강제철거’ 금지

서울시, 재개발 때 조건 부여키로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를 받은 지역의 불법·강제 철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시는 행정지침에 따라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갈등 원인 분석) ▲협의조정(주거권 보호) ▲집행(인권 보호)의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

건을 추가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철거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우리 구청 소식

종로, ‘청렴 ARS·리콜’ 운영

서울 종로구는 민원처리 직원의 청렴도 여부를 체크하는 ‘청렴 ARS’와 ‘청렴 리콜’ 제도를 올해도 유지·운영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직원들의 민원 응대 태도와 업무의 신속·전문성을 평가해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구는 부패 취약분야와 예산집행분야에 대해 감사를 강화해 집중관리에 나선다.

/김현정 기자



마포구,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서울 마포구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는 올해 500가구에 270~340W급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61만원 중구가 52만원 지원한다. 자부담 비용 9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설치 후 전기요금 절감비용(300W 거치형 기준)은 한 달 약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다.

/김현정 기자